

지난해 전력분야에서는 2건의 초대형 사건이 있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이어 국내에서는 사상 초유의 9.15 순환정전을 겪은 것이다.

산업재해 중 가장 큰 재해는 무엇일까? ‘원전사고’ 라고도 하겠지만 발생빈도가 너무 낮아서 별똥별 떨어지는 정도의 재앙이다. 일상적으로 겪는 산업재해 중 가장 큰 것은 광역정전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한번 발생하면 전 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민생에도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다. 광역정전은 재난의 일종으로 경제논리를 초월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겨울 동안 전력보릿고개라는 말이 생겨났다. 대책은 서 있는 것인지?

9.15 순환정전 사후대책으로 부심하고 있지만 상황이 크게 호전되지 않은 것 같다. 수급조절의 실패 원인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계통운영에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사후 조처는 임시방편일 뿐 상황을 크게 바꾸지는 못 한다. 이번 겨울이 큰 탈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추위가 몰려 올 때 마다 전력수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사회 일각에서는 전력 보릿고개를 우려하고 있다.

전력 보릿고개, 대책은 있는가?



문 영 현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그 동안의 낮은 전력 요금으로 수요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발전·송전설비 확충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력 보릿고개가 한번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두 번, 세 번 겹쳐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 큰 걱정은 설비확충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대책 이라고는 전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년마다 내놓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전부다. 모든 국가산업 정책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세워지고 있다. 전력수급계획이 마치 확정된 계획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내막을 보면 이처럼 허황된 계획이 없다. 계획의 근거부터 문제다. 시장 논리에 의거 발전회사나 민간회사로부터 발전소를 짓겠다는 건설의향서를 받은 것이 근거의 전부다. 실행을 어찌 보장할 수 있겠는가? 시장논리라면 짓겠다고 했다가도 여의치 못할 경우 포기하면 그만인 것이다. 계획은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획은 책임지는 기관이 있어야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다. 그러나 전력수급계획을 책임지는 기관은 하나도 없다. 한전이나 발전 6개사는 관련 당사자이지만 전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지는 않다. 주인 없는 공사가 어찌 잘 되길 바라겠는가.



또한, 수급계획은 너무나 낙관적으로 되어 있다. 수요예측도 2~3% 성장으로 낮게 잡고 있다. 발전소 건설은 의향서를 내고 심의를 통과하면 100%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야만 겨우 수급을 맞출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원자력 발전소에 있다. 과거 1970~1980년대에 건설한 원전 9기가 2020년 이전에 폐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전 폐기는 아예 없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고리 1호기의 수명을 20년 연장한다고 하는데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전력이 모자라니까 쓰는 편법이다. 물론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 지은 원전도 사고가 난다. 수명연장은 아무리 잘해도 안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1기 정도면 몰라도 폐기해야 할 원전마다 수명연장이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일까?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결코 대비책이 아니다. 단지 건설의향서 평가에 기초한 시장조사보고서에 지나지 않는다. 안 짓겠다고 하면 그만이다. 그에 대책이라는 것이 이윤을 크게 주면 된다는 식이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보정계수 적용 문제이다. 발전 비용은 한계생산비로 정산하는데 밤낮으로 피크가 걸리면 발전회사가 폭리를 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정계수 도입을 시장론자들은 반대하고 있다. 투자의지를 꺾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탁상공론이다. 왜냐하면 폭리를 보장해 주어도 민간부문의 참여는 극히 미미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알고 있다. 시장 비중이 커지면 불확실성도 커지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발전은 공기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시장시스템을 표방하고 있다. 이율배반이다. 여기서 많은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수급계획이 시장조사보고서 수준에 머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산업안보와 직결된다. 산업안보를 어찌 시장논리에 맡길 수 있겠는가?

안보는 경제논리를 초월하는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책임을 미루지 말고 하루 빨리 미래조치를 담보한 효율적인 전력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에 나가야 한다. 원전 등 대형 발전소 부지와 송전선로 경과지를 비롯한 전원부지 확보에도 정부가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전력대란이 벌어지고 난 후에야 허둥대는 정부는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전력수급을 책임지는 정부기관이 필요한 이유다.

장기적인 전력 수급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정책을 촉구해 본다. KEA